

“수색 1년 걸릴지도”...붕괴사고 현장 ‘참혹’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10일째인 20일 오후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운전석 부근에서 전기공급 등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실종자 가족들, 구조대와 동행 아파트 내부 진입 폭탄 맞은 듯 ‘최악’ ...수색 방식 변경 제안할 것

“다른 역량이 투입된다면 다음 구조는 짧게는 한 달, 그렇지 않으면 6개월, 1년이 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20일 오전 소방당국과 함께 붕괴 사고가 일어난 화정아이파크 내부를 둘러본 뒤 참담한 심경을 내비쳤다.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안모씨는 이날 오전 다른 실종자 가족 2명과 함께 1시간가량 붕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수색 상황과 현장 상태를 참관했다.

가족들은 지상 23층부터 38층까지 16개 층에 걸쳐 붕괴가 진행된 내부를 살펴보고 나서 “현장은 최악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기울어진 타워크레인만 해체하면 구조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직접 보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지만 긴 시간을 견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가족들이 찍어온 사고 아파트 상층부의 모습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처참했다. 사고 여파로 건물 내부에는 콘크리트와 철근, 배관 등이 뒤섞여있고, 바닥에는 사고 충격으로 쏟아진 돌 더미와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투입돼 22층 이상의 잔해물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붕괴 충격으로 생긴 절벽 주변은 손을 대기 힘들 정도였다.

천장과 바닥 곳곳에는 철근과 구조물들이 빠져져 나와 있었고, 구석에는 돌덩이와 벽돌이 쌓여있는 등 벽면은 곧 쏟아질 듯 쩍쩍 갈라져 있었다.

일부 통로는 벽면이 무너져 내려 앉

아 지나갈 수조차 없을 만큼 비좁았다.

안씨는 “현재 역량만으로는 단기간에 실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구조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해본 것 같다. 가족들이 수색 방식 변경안을 논의해 구조 당국에 먼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색과 구조기간이 길어지면 기다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붕괴 현장 주변 상인들과 다른 분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며 “수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을 위한 새로운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놔다.

안씨는 “무너지지 않은 위치로 두세 걸음만 움직였으면 생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붕괴 징후를 알아채고 내부에 전달해주거나 대피령이 있었다면 무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사고 상황을 가정한 위기 대처 훈련을 건설현장에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현산 징계절차 착수... ‘영업정지’ 가능성

학동·화정동 붕괴책임 최장 1년8개월 중징계 예상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원정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건설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청문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

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광주 동구청이 현산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규정은 건설법 제82조 2항 5호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건설법과 시행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산에 대한 책임 규명에 따라 관련 법상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동구청은 현산에 대해 건설법 제82조 2항 6호의 ‘하수급인(하도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학동 참사로 최고 처벌인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외벽 붕괴사고로 1년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1년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환준 기자

화정동 아파트 공사 공법 무단 변경

현대산업개발이 붕괴사고 현장의 공법을 사전 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구 등에 따르면 현산은 당초 붕괴한 39층 바닥(PIT층 천장 슬라브) 면 두께를 15cm로 균일하게 건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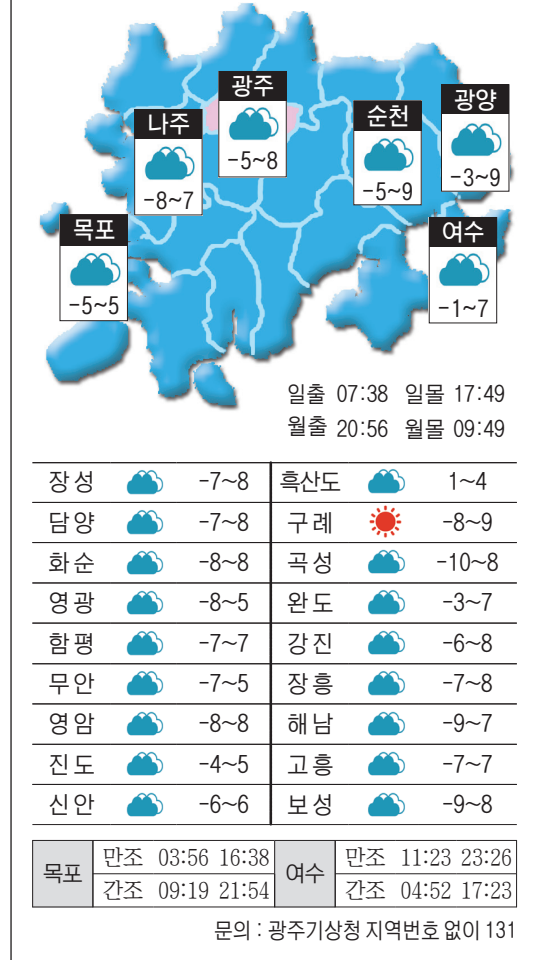
기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붕괴사고 이후 확인된 설계도면상에서 붕괴한 39층 슬라브는 단차가 3개로 나뉘는데,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서는 바닥 면을 35cm 두께로 타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산 측은 당초 광주 서구청이 승인한 두께보다 두 배 이상 두껍게 슬라브 설계구조를 변경하고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았다.

현산은 해당 현장 공사 방식도 승인 절차 없이 바꿨다. 실제 39층 슬라브는 승인받은 공법이 아닌 ‘무지보’ 공법을 사용해 공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홍승현 기자

오늘의 날씨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출범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출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윤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들이 위험으로 내몰리고 죽어가는 야만 사회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안전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현산과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관계 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오늘 크레인 해체...인근에 ‘대피령’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상층부 수색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 타워크레인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20일 오전 정레브리핑을 열어 21일 오후 6시 완료를 목표로 타워크레인 해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타워크레인 반경 79m를 위험 구역으로 정했다.

해체가 진행되는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험 구역 내 대피령을 내린다.

대책본부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과 자동차 등의 위험 구역 내 통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해체를 담당하는 현산은 이상 징후 발견 즉시 경보를 울린다는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단체예약환영★

국제비즈니스호텔W